

20대의 삶과 일 및 인식에 관한 전문가 심층 조사 결과

▶ 조사 개요 ◀

- ◇ (조사 주관) 국민경제자문회의
- ◇ (조사 목적) 한국 20대의 삶과 일, 인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, 기존에 수행된 20대 당사자 조사에 대한 데이터 해석 식견을 정리
- ◇ (조사 전제) 정책 우선순위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과 추가 조사가 필요한 영역으로 식별하여 정책 결정자가 다음 단계 조사와 정책 설계를 위한 1차 자료로 활용
- ◇ (조사 방법) 경제·사회·문화 전문가 25명에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11문항을 제시하고 자유 서술 형식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
- ◇ (조사 분석) 전문가 응답을 가로지르는 진단과 정책 방향을 3개* 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
 - * 1) 이해: 20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
 - 2) 정책: 20대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
 - 3) 정부 역할: 20대와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
- ◇ (조사 기간) 2026년 4월 17일 ~ 5월 6일(약 3주)
- ◇ (조사 기관) 오피니언즈

2026. 6.

※ 본 자료는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조사 기관이 정리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, 국민경제자문회의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

20대의 삶과 일 및 인식에 관한 전문가 심층 조사 결과 요약

1 이해: 20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

□ [진단] 단일 집단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20대

- (단일 집단 인식의 해체) 다섯 가지 요인(부모 자산·학력·고용 형태·성별·지역)이 교차 작용하면서 동일 연령대 내 내부 분화 극심
 - 청년의 다차원적 분화로 종래의 평균적 청년 이미지는 실재하지 않는 가상의 개념으로 전락
- (사각지대의 투명인간화) 비대졸, 비수도권, 플랫폼 노동, 무자산 청년층이 정책적 고려 대상에서 누락되는 현상 노출

□ [작동] 한국 20대를 규정하는 네 가지 메커니즘

- (생존주의적 공정 표출) 기회의 희소성에 대응하여 결과보다 입구의 평등과 절차적 투명성을 중시하는 태도 정착
- (파편화·개별화) 다차원적 격차 심화로 철저히 파편화된 개별 생존 전략으로 갈라진 상태
- (디지털 원주민의 고립화) 누리소통망(SNS)을 통한 끊임없는 비교로 사회적 불안이 증폭되며 연결성과 단절성이 공존하는 양상 전개
- (효능감 중심의 냉소주의) 정치 정당의 이념보다 실질적인 삶의 변화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정치적 부동층 구조 형성

□ [책임] 청년을 들러리로 동원해온 양 진영과 기성세대

- (과거 진보 정권의 청년 공정 감각 오판) 청년층의 분배적·기회적 공정 감각을 도덕적 문제로 재단하며 충돌, 잇따른 언행불일치 사례로 청년층의 분노 고조
- (과거 보수 정권의 청년 남성 중심 정치 동원) 청년의 분노를 정치적 동원에만 소비하고, 실질적인 청년 정책 기반은 해체 유발

- (정치 동원 대상화) 진보와 보수 모두 청년을 정책 의제의 주체가 아닌 손쉬운 정치 동원의 대상으로 다루어 청년의 정치 불신 팽배
- (기성세대의 비용 외주화) 기성세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자산 격차의 수혜를 누리면서 구조적 문제를 청년 개인의 노력 부족으로 환원하며 문제의 책임 회피가 만연

2 정책: 20대에게 무엇을 할 것인가

※ (구조 개혁에 집중) 단기 지원 확대보다 자산 형성 기회 확대,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, 주거 안정, 지역 격차 완화 등 구조 개혁에 정책 역량을 집중

□ [자산] 시혜에서 투자로 - 자산 사다리의 복원

- (종잣돈 형성 경로의 다변화) 주택 청약 연계 장기 저축 인센티브 제공, 비과세 자산 형성 계좌 도입 등 자산 형성 신뢰 기반 강화
- (부모 자산 격차 영향 완화) 금수저·흙수저로 대변되는 자산 격차의 구조적 악순환 완화 및 출발선의 불평등 구조 개선 시급
- (청년 예산의 사회적 자본화) 청년 자산 형성을 단순 복지 시혜가 아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미래 투자 비용으로의 인식 전환

□ [노동] 보호에서 기회로 -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와 안전망 확충

- (노동 보호 강화)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화, 불안정 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 강화, 플랫폼 노동 표준 계약 정착 유도
- (재도전 안전망 구축) 청년 실업 부조 보장 수준 인상, 직업 훈련 수당 강화, 평생 학습 체계 확장으로 상시적 재도전 기회 보장 강화
- (경력 단절 인식 개선) 채용 기준을 첫 직장의 서열 중심에서 중소 기업, 창업, 프리랜서 등 다양한 경험의 누적 가치 인정으로 변경

□ [전달] 전달에서 체감으로 - 평균이 아닌 가장 어려운 청년에게

3 정부 역할: 20대와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

□ [구조] 중재가 아니라 토대를 바꾸는 일

- (알고리즘 환경 개선) 정책이 청년에게 닿기 전에 플랫폼 알고리즘으로 세계관을 형성함에 따라 **알고리즘 환경에 대한 개선*** 필요

* 1) 알고리즘 투명성 보고의 제도화, 2) 다양성 노출 알고리즘 설계, 3) 혐오 콘텐츠 규제, 4)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 신뢰 있는 기관 및 인프라 중심

- (오프라인 속의 공간 조성) 온라인의 확증 편향을 제어하기 위해 다른 생각을 가진 청년들이 실제로 만나는 오프라인 속의 공간 조성

□ [권력] 청년에게 권력과 결정권을 넘겨라 (비례성과 대표성 확보)

- (대상화가 아닌 대표성) 국회와 지방의회에 청년의 정치적 대표성을 비례적으로 반영하는 정치 개혁
- (실질적 거버넌스 권력 이양) 위원회, 자문 기구 형태를 탈피하여 의제 설정, 예산 배분, 정책 평가 단계까지 청년이 스스로 정책을 만들고 활용하도록 청년 당사자의 실질적 권한 행사로의 구조 개편
- (추첨제 기반 청년의회 실험) 수도권·지방, 성별, 계층 비율을 안배한 추첨제 공론 기구의 설치로 양극단 배제와 균형 있는 입법 전 단계 의제 설정 도모

□ [태도]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청년의 언어로

- (훈계·동원의 언어 청산) 계몽주의적 태도와 선거철 이미지 마케팅용 단발성 소통을 전면 폐기하고 삶의 변화를 유도하는 행정으로 전환
- (청년 주도 채널 활성화) 정부 직접 제작 방식에서 탈피하여 청년 크리에이터와 미디어가 자기 시각으로 정책 정보를 재구성하도록 예산 및 자율성 보장 강화

청년 문제는 개인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자산·고용·지역 격차가 누적된 구조적 문제이며, 청년정책은 시혜가 아닌 국가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전환되어야 함